



콜롬비아

대외여건 개선으로 성장률 회복 전망

콜롬비아는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원유 및 커피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 내전으로 인한 기간시설 파괴와 원유 생산량 감소, 케릴라 반군과의 평화협상 지연으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 지속과 외국인투자 감소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당초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지난해 1.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지난해 IMF와 합의한 주요 거시경제목표치¹⁾를 달성함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교부법 제정 등 다수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에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결과 2002년에는 동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도 제고되고 경제전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금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성장 전망

2002년 1/4분기 중 콜롬비아 경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과 전통산업의 수출 둔화 등의 여파로 0.5% 성장에 그쳤다. 특히, 전체 수출의 44.4%를 차지하는 원유, 커피, 석탄 등 전통산업의 수출부진으로 1/4분기의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8%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에는 미 상원의 안데안(ANDEAN)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법(Andean Trade Preferences Act: ATPA) 연장, 국제유가의 강세,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의 하향 안정세 등 대외여건 개선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외화조달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국 경제는 금년 중 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2001년 IMF와 합의한 거시경제목표치는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8.0%,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각각 GDP 대비 3.0%, 외환보유고 83억 달러, 환율인상률 16.5% 등이었음.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시경제목표치를 달성함.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f	2003f
경제성장률	-4.2	2.7	1.4	2.4	3.6
소비자물가상승률	10.9	9.2	8.0	5.8	5.7
경상수지/GDP	0.4	0.4	-2.0	-1.8	-2.6
재정수지/GDP	-5.9	-6.9	-5.2	-4.0	-3.0
총외채잔액	34,700	34,100	36,600	38,300	40,700
외채상환비율(D.S.R)	41.4	28.6	31.0	30.0	35.4

자료: EIU.

특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안데스 4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ATPA는 원래 2001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5월 15일 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어 미 상원이 ATPA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안데스 국가들은 2006년까지 관세혜택은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미 상원과 하원의 단일안 작성과정에서²⁾ 일부 섬유 품목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대미 수출품의 75%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콜롬비아는 16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연 5,000만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 증가, 마약 생산 억제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콜롬비아 정부는 2003~05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6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3년, 5년, 7년 등 3종의 폐소회표시채(Titulos de Tesoreria: TES)로 교환함으로써 외화조달 압력 완화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가신인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 개선과 맞물려,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노동법 개정, 공공주택 건설 확대 및 공공보건 분야 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종합대책의 결과로 건설업과 부동산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실업률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2002년 콜롬비아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3%의 안정된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2002년 8월에 출범할 우리네 정부의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네 신임 대통령의 정책수행 난관 예상

지난 5월 26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선에서 무소속 알바로 우리네 벨레스(Alvaro Uribe Velez)후보³⁾가 유효표의 53%를 얻어 임기 4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

2) 안데스 국가들은 하원법안이 섬유 및 참치 통조림까지 특혜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등 상원법안보다 관대하므로 최종안이 하원법안대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3) 우리네 대통령은 최대 좌익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혁명무장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에 아버지를 잃은 전력이 있고, 게릴라 내전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인 안티오키아(Antioquia)주 지사로 재임시 강도 높은 반군토벌 정책을 펼쳤음.

다. 3년 간 지속되어 온 정부와 게릴라 반군간 평화협정의 최종적인 결렬⁴⁾, 계속되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 감소 등의 경제실정으로 현 파스트라나(Pastrana)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우리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집권당인 보수당(PC)과 제1야당인 자유당(PL)을 누르고 전체 의석수의 55%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베 대통령 당선자는 강력한 군대, 부패 척결, 견실한 재정,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게릴라 반군의 강경 진압을 천명한 우리베 당선자는 군·경찰의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0만 명으로 늘리고 100만 명 정도의 민간 정보원을 양성함으로써, 게릴라 반군의 테러 행위에 대한 확고한 대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베 당선자는 평화협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게릴라 반군의 무장 해제와 납치행위 중단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게릴라 반군과의 재협상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베 당선자가 내건 개혁정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베 당선자는 의원 수 축소, 세금 인상, 연금법 개정⁵⁾ 등을 통해 국방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인상과 제한된 연금법 개정만으로는 연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의원 수 축소와 사회보장법 변경은 곧 전체 의석수의 3/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개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무소속인 우리베 당선자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게릴라 반군과의 내전 심화는 정치·사회 불안, 원유생산 시설 파괴, 수출 감소,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 경제성장 둔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베 당선자의 강경 노선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崔 盛 圭】

4)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정부는 1999년 이후 3년간 FARC와 평화협상을 벌여왔으나, 반군측이 테러공격과 납치행위 중단에 관한 정부의 제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함으로써 2002년 2월 평화협상이 완전 결렬되었음.
5) 현 파스트라나 정권은 지난 2001년 12월 연금수급 가능 근속기간 연장,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세 별도 부과, 연금 월수령액을 최저임금의 20배 이내로 제한, 현행 특혜 연금 분야(군인, 교사, 법관, 석유공사, 통신공사 직원)에 대한 특혜 축소, 공공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 현행 연금 관련규정 적용 배제 등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